

‘침수 걱정 끝’...나주 금천·산포 하수도정비 국비 투입

장맛비마다 물난리를 겪던 전남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이 침수 걱정 없는 마을로 거듭난다.

정부가 지정하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나주시는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가 기후 에너지환경부의 ‘2025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나주시는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55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침수 대응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집중호우 때 하수 범람 피해가 잦거나 우려가 큰 지역을 매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7곳이 새로 포함됐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포·금천지구 우수관로 1.4km를 개량하고, 분당 800t 규모의 빗물펌프장 1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수 능력을 높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침수된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일대.

사진=나주시제공

국비 등 355억 투입 상습 침수지 전면 개선 빗물펌프장 신설·노후 우수관로 1.4km 정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부터 3년간 본격 추진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수해를 입은

금천면과 산포면이 이번 사업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키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한 국비 지원 제도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충당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운영 내실화 논의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통해 심의위 운영 공정성·전문성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9~30일 여수에서 ‘하반기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열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관련된 이론과 현장의 실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적 질문 ▲ 불복절차(인용사례)를 통한 조치결정의 전문성 논의 ▲ 관계회복을 위한 사안처리 절차 및 활용 방안 논의 ▲ 사례와 판례로 풀어나가는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조치의 형평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담당자들은 학생과 학부모

모를 만났을 때 ‘공감적 질문’, ‘개방적 질문’, ‘적극적 경청’에 대해 배우고, 사안 조사 면담 시 유의 사항과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인용사례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조치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과 공정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질을 높이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정치인 불법 현수막 1581건... 광주 4개구, 과태료 부과 ‘0건’

광주 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올해 1400장이 넘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구는 헬스장 등 일반 시민들의 불법 홍보물 980건에 대해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정치인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광주 지역 불법 정당 현수막은 총 1581장이다.

이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동·서·남·북구)자치구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이례적으로 광산구만 올해 8월까지 불

남구의원 출판기념회 홍보 불법 현수막 과태료도 고심 시민단체 “정치인 특혜 안돼... 법에 근거해 행정 펼쳐야”

법 정당 현수막 120건에 대해 38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남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한 남구의원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 여러 개를 걸어 철거 민원이 이어졌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곳곳에 걸렸지만 해당 현수막은 출판기념회가 끝난 지난 25일이 지나서 모두 철거됐다.

현재까지 해당 불법 출판기념회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남구는 정당·정치인에게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부과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정당·정치인들이 명절이나 특정 시기에 불법 현수막을 많이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남구는 올해 지역 헬스장·아파트 분양 광고와 같은 불법 홍보물(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980건을 적발해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면적 3㎡이상~5㎡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32만 원, 2차 42만 원, 3차 55만 원이다. 5㎡ 초과~10㎡이하의 경우 1차 80만 원, 2차 105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135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뒀던 안 된다며 법에 근거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공무원들이 정치인이 싫어하거나 눈치가 보이면 쉽게 부과하지 못한다”며 “시민이 건 불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하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에 근거해 부과를 하고 현수막 게시 장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은 돌봄과 복지 등 자원봉사 활동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공개한 ‘자원봉사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시민 1만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해 이 중 71%가 돌봄·복지·환경보호·지역축제 행사 지원 등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광주시민 10명 중 7명 자원봉사 경험... 돌봄·복지·환경보호

적 여유가 없어서가 58%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 정보 및 참여 방법을 몰라서(27.8%) 순이었다.

반면 시간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활동(37.2%)이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29.1%)이 있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 분야는 환경보호(22.9%), 돌봄·복지(18.3%),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16.2%) 순이다.

자원봉사 시민의식 조사 설문은 11월1일 오전 10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2025 자원봉사 시민의식조사 공론의 장’을 통해 공개된다. 또 이날 행사에서

는 김용철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가 ‘자원봉사 시민의식 10년의 변화추이’ 발표에 이어 ‘시민이 말하는 자원봉사의 내일’을 주제로 토론회도 펼쳐진다.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광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 축”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공동체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광주·전남 7663명 ‘관리 사각’ 우려 성폭력특례법 따라 등록 대상자 광주 3387명·전남 4276명 광주 북부서·전남 여수서 관리 대상 ‘최다’...전담인력 부족 ‘소재 불명’ 대상자는 광주 10명·전남 6명... ‘충원·제도강화’

광주·전남 지역 성범죄자 7663명 가운데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3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는 광주 3387명, 전남 427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재를 알 수 없는 등록 대상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는 확정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3~12개월)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 5개 경찰서별 등록 대상자는 북부서 1052명, 광산서 854명, 서부서 765명, 남부서 428명, 동부서 288명 순이다. 관리 인력은 각 경찰서 1~3명에 불과해 1인당 담당 대상자는 남부서 428명 등 288~428명에 달했다.

전남 22개 경찰서에서는 여수서가 678

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634명, 목포 626명 순이었다. 완도서는 4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 일부 경찰서에는 전남 관리 인력이 1~2명만 배치됐고 나머지 17곳에는 전남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재를 알 수 없는 등록 대상자는 광주 10명, 전남 6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03명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지역마다 최소 1명 이상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점검을 회피 하더라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등록 대상자에게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